

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

박수현

(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, 前 청와대 대변인)

- ◇ 동북아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하는 동시에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
- ◇ 행정수도의 완성과 국토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실현

□ 국가불균형발전의 심화, 이대로 둘 것인가

- 1964년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 시행 이래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결과는 지역발전의 양극화도 모자라 수도권 일극화로 집중 가속화
- 수도권 위주의 성장지속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증가와 지역발전의 양극화 확대
 - * 국토의 현안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, 지역간격차, 양극화, 주거불안정 등 격차문제(52.0%)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 (2020,국토연구원)
- 국토면적의 11.8%인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, 교육, 문화 등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은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
 - * 전국 228개 시·군·구 중 42.5%인 97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국가불균형의 심화는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위기를 맞고 있음('19.11월, 한국고용정보원)
-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.

□ 혁신도시 지정 및 추진에 대한 재검토

- 정부, '05년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발표하며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대전·충남을 제외한 11개 시·도에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
-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였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해 혁신도시 성장 및 지역 발전효과 가시화

⇒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역설적 결과로 대전, 충남의 경우 불균형 발전의 피해지역이 됨

❶ (대전) 세종시 조성 후 103,343명의 인구유출('14~'18). 이는 세종시 전입인구의 36.5%에 달함

- 창업진흥원·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지역내 공공기관 세종이전 및 대전청사 소재 중앙부처 이전 움직임 등으로 도시침체 더욱 가속*

*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(2017.6.) / 2015년부터 대전을 쇠퇴지역으로 분류

❷ (충남) 세종시 출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지역임에도 사회적·경제적 손실*을 감내하고 혁신도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도 소외

* 인구 13.7만명 감소, 면적 437.6km²(서울시 면적의 3/4) 감소, 경제적 손실 25.2조원('12~'17년, 연 4.2조원) 발생

-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뚜렷한 만큼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제2의 혁신도시 확대추진이 절실



그림 1. 혁신도시 성장 및 지역발전효과

※ (참고1)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('20.1.14)

“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도록 하자는 요구가 오래 전부터 있었고, 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되면 지역에 도움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.”

※ (참고2)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요내용

◇ 균특법 18조의2 신설 ('20.07.08. 시행)

-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, 도, 특별자치도별로 혁신도시 지정
-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장(대전·충남) ⇨ 국토부에 신청
-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지정

□ 이제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수정 필요

-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의 문제해결만이 아닌 과밀화된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중앙과 지방의 상생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
- (더불어민주당)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등 극단적 불균형에 빠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선택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제하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가지 목표 설정

- ❶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소멸로 대비되는 지난 시기 국토불균형 발전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
- ❷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핵심축으로 행정수도 완성 추진
 - 다만 국회, 청와대 이전 여부와 방식은 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따르고,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될 것임
- ❸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서울의 새로운 비전과 구상을 수립

□ 결론 :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

-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왔지만 그 결과는 국가불균형의 심화
 - 정치권과 정부, 학계, 시민사회단체, 언론 등 대한민국의 지식인 모두가 반성할 일
 -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희망한다면, 국가정책방향 및 국가발전전략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.
- ⇒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목표
-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·행정수도 완성 TF(단장 우원식)는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, 다양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제시되었음. 그 몇 가지를 소개하면,

- ❶ (서울) 글로벌 경제수도 건설과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의 수도, 글로벌 금융허브, 세계평화도시, 제조업 기반 스마트 (디지털)경제도시, AI 국제 거점
- ❷ (부산·울산·경남) 전략산업의 유사성과 정책자원의 분산을 고려, 동남권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4차 산업혁명 거점 조성, 동남권 新물류체계 조성, R&D 전담기구 설립 및 거버넌스 구축
- ❸ (강원도) 한반도 북방경제 선도를 위한 ‘강원특별광역권’이 제안되고, 강원도를 평화수도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논의
 - 많은 전문가들은 행정수도가 다극국토체제형성의 선도역할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음
 -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‘혁신도시’를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더욱 내실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함